



의안번호

제43호

## 논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8. 7. 12.

# 논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3호
----------	------

제출연월일 : 2018. 7. 12.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 1.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 및 2017년 12월에 배포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및 운영,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 및 방법 등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을 「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
- 나. 납세자보호관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세무부서 외의 부서 중 자치행정과에 배치 함(안 제4조)
- 다. 납세자보호관은 6급,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안전 심의, 고충민원의 분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 마.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바. 권리보호 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 요청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 사.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29조부터 제30조까지)

아.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 분석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심사 : 규제심사필(규제대상아님)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 2018. 4. 20. ~ 2018. 5. 1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충청남도 소관실과 : 세정과(041-635-3631)

##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

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제1항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자치행정과에 둔다.

-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법 제147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500만원 이상인 안건

3.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령에 따른다.

## 제4장 고충민원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은 제2조제1항제3호의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분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시장의 부작위 등으로 발생한 사안인 것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처분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

하여 처리한다.

**제17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2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2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제6장 권리보호 요청

**제24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6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7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9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1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33조(업무의 범위)** 시장은 영 제51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34조(기한의 연장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6조(가산세의 감면신청)**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세 무 과 장	진 용 민
	세 정 팀 장	박 동 주 (746-5431)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논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세자보 호관의 설치·선발기준·업무 ·권한등을 규정하고·납세자 보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세무상담·납세자권리현 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 사·불합리한 지방세행정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함으 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p> <p>1. “민원인”이라 함은 세무부 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2. “고충민원”이라 함은 세무 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사 실행위를 포함한다)·부작위</p>	<p style="text-align: center;"><u>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 제77조에서 위임된 납 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 ----- ----- 뜻은 -----.</p> <p>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 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p> <p>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p>

·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지방세행정 제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세무부서”라 함은 세무과를 말한다.

4. “세무부서장”이라 함은 세무과장을 말한다.

<신 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이외의 조직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 <신 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세무부서의 추천을 받아 납세자보호관의 적격여부에 대한 감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② -----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 예를 따른다.

### <삭 제>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자치행정과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이상
2. 경력기준: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
3. 청렴성·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

② 납세자보호담당은 세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세무 상담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사항
4.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

한 사항

제6조(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 ① 고충청구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5조 본문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부서장이 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부서장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제3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며, 고충민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소속부서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에 규정  
 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  
 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  
 령권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  
 한 세무조사중지명령권

3.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에 대  
 한 시정요구권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  
 한 소명요구권

5. 과세자료열람·제출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6. 납세자권리현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권한은 과세처분·세무조사중  
 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별  
 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세무부서장에게 행  
 사한다.

## 장이 분장하는 업무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  
 ----- 제6조에서 규정하  
 는 -----  
 -----.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  
 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  
 구

4. -----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삭 제>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권  
 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  
 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처분의 중지·세무조사의 중지·처분의 시정·처분의 소명을 요구 받은 해당 세무부서장은 등 은 과세처분의 중지 등을 요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5호의 권한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하고, 동항 제6호의 권한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한다.

#### <신 설>

제8조(인사우대 등)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이하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승진 등 인사상에 있어서 우대한다.

② 납세자보호관등의 고충민원 처리실적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자 선발시 우대한다.

③ 세자보호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자보호관등의 교육)

#### <삭 제>

#### <삭 제>

####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 및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논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제

납세자보호관등은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직무교육 등을 받아  
야 한다.

#### <신 설>

제10조(납세자보호관등의 복무자  
세) ① 납세자보호관등은 납세  
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 억울한 납세자  
가 한 명도 없게 한다는 사명감  
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② 납세자보호관등은 납세자에  
게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등은 지방세공  
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  
여 세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  
는 등 부단히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납세자보호관실 환경) 납  
세자보호관실은 민원인이 이용  
하는데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설  
치 하되·부득이한 경우 자체실  
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제3장 고충민원 처리

##### 제1절 통 칙

제12조(고충민원 처리준칙) ① 지

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  
원회의 운영은 법·영에 따른  
다.

#### 제4장 고충민원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  
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  
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  
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  
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  
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 <삭 제>

#### <삭 제>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방세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 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도 직권시정이 가능한 세금과 관련된 고충은 신속하게 시정조치 함으로써 국민이 지방세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공무원은 부과된 세금에 대한 사후구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공무원은 지침 등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집행으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됨으로써 발생하는 고충은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행정과 관련된 납세자의 모든 고충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봉사자세를 확고히 하고, 공평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충청남도 또는 논산시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

사한 업무처리로 그 과정과 결과를 누가 보든지 공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처리·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2. 당초의 처분·처리·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3. 당초 처분·처리·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4.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분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시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것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당초의 처분이나 처리시 지침·기준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6. 부작위·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7.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민원인이 새로운 증빙 또는 거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처분종료일 90일 전까지 시장·군·구청에 그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히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

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행정안전부장관·감사원장·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세금관련 고소 및 고발

5.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②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다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상세히 지도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분류)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시장이 조사하거나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시장의 처분·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3. 기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  
백하게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시  
장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  
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  
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  
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  
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  
다.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  
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  
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  
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  
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  
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  
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  
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  
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  
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세무부서간 의견조회·법령자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삭 제>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한 연장사유·실지조사 등의 소요 일수·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고충내용에 대한 시장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9조(불이익변경금지) 시장은

제18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 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신청의 취하) -----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 전까지 ----- . ----- 대해서----- .

제19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당초 처분보다 민원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신 설>

제20조(불복대상에서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충민원 처리

제21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 ① 논산시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고충

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2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삭 제>

제21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민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시장의 선람 후 즉시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2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처리방향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3조(해당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서식)에 고충민원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2조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당해 고충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 5호서식)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 설>

제24조(실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열람)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제6장 권리보호 요청

제24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 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등이 소지하는 과세  
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  
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기  
타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기타 필요한 물건·사람·장  
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제25조(고충민원의 구분) ①납세  
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청구내용  
과 세무부서 등의 회보내용 및  
실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제7조 제  
1항 제1호 내지 3호에 해당하  
는 권한과 관련된 것)

2. 제1호중 납세자보호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회부대상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송대상

4. 시정불가대상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직권시정요구대상으로 한  
다.

1.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제25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  
보호요청은 제2조제3호에서 규  
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  
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  
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  
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  
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  
으로 한다.

2. 조례 및 기본통칙 등에 위배  
된 처분

3.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  
로 계산된 처분

4. 민원인이 정당한 거증을 제  
시한 경우

5. 처분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 고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  
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  
구결정례, 예규 등으로 일반  
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  
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상이 되는 사항

③ 제15조의 고충민원분류에 따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송대상  
으로 한다.

④ 고충의 내용이 법령 등의 규  
정에 명백히 위배되어 이유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불  
가 대상으로 한다.

제26조(위원회 회부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대하  
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  
리한다.

제26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

1.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
2.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

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

수, 체납처분 등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 고충민원 · 불복청구 ·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 환급 ·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 · 징수와 관련 없는

제27조(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  
관은 직접 처리할 고충민원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  
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 고충민원  
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세  
무부서에 통보하여 직권시정  
토록 한다.

2. 이송대상 고충민원은 이송사  
유 및 고충민원서류 일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한  
다.

3. 위원회 회부대상 고충민원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시정불가대상 고충민원은 민  
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  
액 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  
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  
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7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  
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  
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치를 취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  
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28조(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  
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고충내  
용, 세무부서 의견, 심리의견  
등을 기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  
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한 위원회에 회부할 심의자료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당해 위원  
들에게 배부한다.

#### <신 설>

제29조(위원회 구성) ① 고충민원  
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  
의 자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제2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  
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  
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  
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  
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  
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는 14일로 한다.

####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 <삭 제>

1. 납세자보호관
  2. 세무부서장
  3. 시장이 2년 이상의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 이상 소속공  
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4.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  
사·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서 법학·경제학·경영학·  
회계학·기타 세무 관련학과  
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하는 자, 경제사회단체·시  
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  
직원 등으로 법률·회계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국세·지방세경력 10년 이상  
의 전직 공무원 중에서 지방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자 4  
인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제외한 위원 중 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제3항 제1호, 제2호 위원의  
임기는 현직에 한하며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  
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 당해 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을 간사로 임명한다.

제30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서면심의도 가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는 의결(이하 “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 시정하는 의결(이하 “일부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 고충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불가하는 의결(이하 “시정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의결사항을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

<삭 제>

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시정의결(일부시정의결을 포함한다)의 고충민원은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2. 시정불가의결을 한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고충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

제31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내용에 대한 심의로부터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고충내용 심의시 참석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민원인 또는 그 친족
2. 민원인의 사용인이거나 그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민원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관여하였던 자

⑥ 회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설명한 후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다.

⑦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납세자보호관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민원인에게 위원회 회부사실·회의일자·의견진술 신청여부를 전화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⑪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 동조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적용한다.

제32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에게 시정불가 통지를

제32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구술 또는 전화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 <신 설>

제33조(사후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3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 또는 보고한 후 전화로 통지서 수령여부·처리내용의 이해여부·처리결과에 대한 만족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34조(과생자료의 통보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

####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33조(업무의 범위) 시장은 제6조의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34조(기한의 연장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

리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해당 세무부서 또는 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4장 세무 상담 및

#### 사전지도·보호활동

#### 제35조(세무 상담의 기본자세) ①

세무 상담을 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세금에 대한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청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② 세무 상담은 가능한 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훈령·지침 등 관례적이고 획일적인 처리기준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세무 상담은 민원인을 고객

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35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으로 대우하여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친절한 자세  
로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제36조(처리기간) 세무 상담은 즉  
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세무부서등과의 협의 처리  
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협의처리) ① 세무 상담  
사안 중 세무부서등과의 협의를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협의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주  
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세무  
상담처리협조전(별지 제9호서  
식)에 의하여 상담협의를 받은  
세무부서등의 장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협의에 응  
하여 신속한 상담처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납세자 여론 정보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상담과정  
에서 인지한 다음 각 호와 같은  
납세자의 여론 정보를 수집한  
다.

1. 지방세행정에 대한 문제점 ·  
의견

제36조(가산세의 감면신청) 법 제  
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  
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  
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  
을 하여야 한다.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  
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  
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불합리한 법령·예규·훈령  
· 행정절차 등 지방세행정제  
도에 대한 건의의견

3. 탈세·부동산투기·새로운  
세원개발 등에 대한 각종 정  
보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  
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  
자의 여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출  
장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세무 상담 자료비치) ①납  
세자보호관은 세무 상담에 필요  
한 법령집·예규·훈령집·사  
례집·각종 홍보물·교육자료  
등을 비치하여 세무 상담 자료  
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배부 받은  
자료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  
록 납세자보호담당에 대하여 교  
육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 상담 일지) 납세자보  
호관은 납세자보호관실 상담일  
지에 일일 세무 상담내용 및 건

제39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  
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  
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수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장 납세자권리헌장

##### 제41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분장한다.

##### 제42조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①

모든 지방세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취지·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3조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 <삭 제>

##### 제29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  
-----  
-----.

② -----  
- 제정·개정 -----  
--- 사항-----.

##### 제30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  
-----  
-----  
-----.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삭 제>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①납세  
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납세자  
권리현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서(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1. 징수분야: 고지서 송달(공시  
송달)의 적정여부, 압류 및  
압류재산매각절차의 준수여  
부,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제  
한의 적정여부, 체납 및 결손  
처분자료의 신용정보제공 적  
정여부, 환급기한의 준수여  
부, 물납신청의 수용여부, 1  
억원 이상 체납자명단 공개  
등

2. 조사분야: 세무조사 사전통  
지의 이행여부, 납세자권리  
현장의 교부여부, 조사연기  
신청의 수용여부 및 조사연기  
거부의 적정여부, 세무대리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  
해여부, 중복 조사금지규정  
의 위반여부, 세무조사결과  
의 통지여부 등

3. 기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관서 제출 자료에 대한 진실성 추정의 침해여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등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그 심사결과 및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6장 지방세 제도개선

##### <신 설>

#### 제44조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과세전 적부심 및 이의신청 관련 업무

##### <삭 제>

####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삭 제>

등을 수행하면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의견을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별지 제11호서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 상담과정 등에서 수집된 납세자 여론·정보로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하고, 기타의 납세자 여론·정보는 세무부서 및 담당 관련 부서로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5조 (지방세 제도개선 건의수령) ①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등 납세자의 건의사항을 수령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

<삭 제>

<p><u>방세행정 제도개선 건의내용에</u> <u>대하여 7일 이내에 검토의견 및</u> <u>처리방향 등을 납세자에게 회신</u> <u>하여야 한다.</u></p>	
---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해당없음

나. 추계결과

해당없음

3. 작성자

세무과장    진   용   민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2.29.]